



우리 나라 기업 경영의 저해요인과 정책대안

한국리서치-매일경제 공동조사

2015. 1.

Hankook | Research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 ❑ 한국리서치와 매일경제는 기업체 임직원, 경제분석 연구소 소속의 경제, 경영 전문가,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 경영과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 ❑ 설문조사의 항목은 기업경영에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항목을 각 응답자가 4개씩 선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저해요인으로 선정한 이유와 그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 응답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 이번 설문조사에는 100대 기업의 임원급을 포함한 기업인 110명, 경제기관 및 민간경제연구소 소속의 경제, 경영 관련 박사급 연구원 21명,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수 105명 등 23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두 944개의 기업발전 저해요인을 선정하였다.
- ❑ 이번 조사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와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기업 경영 저해요인 우선순위

(기업인, 경제전문가, 대학교수)

표 1. 기업발전 저해요인(기업체 임원)

순위	저해 요인	사례 수	비율
1	과도한 기업 규제	69	16%
2	강성노조	60	14%
3	반기업 정서	52	12%
4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49	11%
5	'아니면 말고' 미디어	30	7%
6	'무소불위' 기업 오너	29	7%
7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28	6%
8	저출산	28	6%
9	정치금융	18	4%
10	좀비기업	15	3%
11	짜퉁	13	3%
12	'서비스마인드 제로' 지방자치단체	10	2%
13	국세청의 표적 세무 조사	10	2%
14	획일적 대입 시스템	10	2%
15	산업스파이	7	2%
16	검찰의 꼬리물기식 수사	5	1%
17	뒷북치는 한국은행	5	1%
18	예측불허 북한	2	0%
응답 수 합계		440	100%

표 2. 기업발전 저해요인 (연구소 경제,경영 전문가)

순위	저해 요인	사례 수	비율
1	과도한 기업 규제	16	19%
2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11	13%
3	정치금융	11	13%
4	강성노조	10	12%
5	'무소불위' 기업 오너	9	11%
6	반기업 정서	7	8%
7	저출산	6	7%
8	획일적 대입 시스템	3	4%
9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2	2%
10	좀비기업	2	2%
11	'서비스마인드 제로' 지방자치단체	2	2%
12	검찰의 꼬리물기식 수사	2	2%
13	'아니면 말고' 미디어	2	2%
14	산업스파이	1	1%
응답 수 합계		84	100%

표 3. 기업발전 저해요인 (대학교수)

순위	저해 요인	사례 수	비율
1	'무소불위' 기업 오너	66	16%
2	강성노조	55	13%
3	정치금융	44	10%
4	과도한 기업 규제	33	8%
5	저출산	33	8%
6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30	7%
7	반기업 정서	23	5%
8	획일적 대입 시스템	21	5%
9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18	4%
10	좀비기업	18	4%
11	'서비스마인드 제로' 지방자치단체	16	4%
12	'아니면 말고' 미디어	14	3%
13	짜퉁	13	3%
14	산업스파이	11	3%
15	검찰의 꼬리물기식 수사	7	2%
16	뒷북치는 한국은행	7	2%
17	국세청의 표적 세무 조사	6	1%
18	예측불허 북한	5	1%
응답 수 합계		420	100%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 선정이유 및 정책대안

표 4-1. 과도한 기업규제 선정이유

순위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 비율
1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20	24%
2	기업 활동 위축과 기업경쟁력 저하	20	24%
3	투자 위축	10	12%
4	중기적합업종의 문제점	9	11%
5	수도권 규제 문제	5	6%
6	시장 경쟁 저해	4	5%
7	국내기업 역차별	4	5%
8	규제로 인한 비용	3	4%
9	현실에 맞는 규제	3	4%
10	경기침체요인	2	2%
11	공무원의 관료주의	2	2%
12	국가경쟁력 약화	1	1%
13	규제의 형평성 문제	1	1%
14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1	1%
응답 수 합계		85	100%

표 4-2. 과도한 기업규제 정책대안

순위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 비율
1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및 철폐	35	48%
2	시장경제와 균형 있는 규제 정책	11	15%
3	정부 부처의 역할 재검토	6	8%
4	기업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5	7%
5	과감한 정치적 리더십	4	5%
6	각종 규제를 인센티브제로 전환	3	4%
7	중소기업 보호육성	3	4%
8	외국 사례 참조 활용	2	3%
9	과도한 대기업 규제 완화	2	3%
10	대기업 진출 업종 제한 유지	1	1%
11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1	1%
응답 수 합계		73	100%

강성노조: 선정이유 및 정책대안

표 5-1. 강성노조 선정이유

순위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비율
1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이기주의와 강성노선	42	42%
2	기업의 경쟁력 약화	17	17%
3	고임금 고비용 저효율 낮은 생산성	14	14%
4	비정규직 격차 심화	6	6%
5	고용감소	5	5%
6	고용 유연성 저해	4	4%
7	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	4	4%
8	기업과 사회에 불안과 분열초래	4	4%
9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3	3%
10	글로벌 투자자의 걸림돌	2	2%
응답 수 합계		101	100%

표 5-2. 강성노조 정책대안

순위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 비율
1	강성노조활동 법적 규제강화	22	26%
2	노사간 상생방안, 동반자의식 모색	19	22%
3	노동시장의 유연화	17	20%
4	성과급 등 임금체계개편	4	5%
5	노사정 협의체 활성화	3	3%
6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완화	3	3%
7	단체협상 제도개선	3	3%
8	복수노조 활성화	2	2%
9	사회안전망 강화	2	2%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2%
11	경기활성화	1	1%
12	기업규제철폐	1	1%
13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1	1%
14	대국민 홍보 강화	1	1%
15	아웃소싱	1	1%
16	인재육성과 기술개발	1	1%
17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1	1%
18	정치권, 시민단체 개입배제	1	1%
19	해외사업장 확대	1	1%
응답 수 합계		86	100%

오너 경영체제 요인: 선정이유와 정책대안

표 6-1. '무소불위' 기업오너 선정이유

순위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비율
1	경영권 세습 부작용	15	31%
2	오너중심 독단경영 스타일	14	29%
3	전문성 약한 후진적 기업경영	13	27%
4	경영투명성 부족	4	8%
5	도덕성 책임감 부족	3	6%
응답 수 합계		49	100%

표 6-2. '무소불위' 기업오너 정책대안

순위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비율
1	주주, 전문경영인, 이사회, 감사 권한 강화	18	35%
2	경영권 세습에 대한 제도적 규제강화	8	15%
3	불법행위의 강력한 법적 감시와 제재	7	13%
4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6	12%
5	공공성, 공익성 중시 문화와 제도 구축	5	10%
6	오너 일가의 인성교육 강화	3	6%
7	상속, 증여세제 강화	2	4%
8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2	4%
9	대기업 비중 축소	1	2%
응답 수 합계		52	100%

사회 일반의 반기업정서: 선정이유와 정책대안

표 7-1. 반기업정서 선정이유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비율
1	기업활동의 위축	21	39%
2	대기업, 부자를 죄악시키는 풍토	10	19%
3	사회 일각의 반기업정서 부추김	10	19%
4	압축성장, 불균형 성장의 영향	9	17%
5	기업과 시민의 공동책임	1	2%
6	기타	3	6%
응답 수 합계		54	100%

표 7-1. 반기업정서 정책대안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비율
1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16	35%
2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감 증대	10	22%
3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6	13%
4	기업에 대한 악의적 여론 차단	5	11%
5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11%
6	언론의 긍정적 역할	3	7%
7	기타	1	2%
응답 수 합계		46	100%

반시장적 국회와 정치권: 선정이유와 정책대안

표 8-1.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선정이유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 비율
1	여, 야간 정쟁과 이념적 대립	10	17%
2	반시장주의적 정책	10	17%
3	복지와 분배의 포퓰리즘 정치	9	16%
4	정당과 이익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8	14%
5	전문성 부족	8	14%
6	경제활성화 법안 발목잡기	4	7%
7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	4	7%
8	전반적인 국회개혁 필요	3	5%
9	포퓰리즘적 복지, 분배위주	2	3%
응답 수 합계		58	100%

표 8-2. 반시장법 양산하는 국회 정책대안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 비율
1	입법의 전문성 강화	12	19%
2	국회의원 의정활동 공개 및 평가제도	7	11%
3	입법안 사전의견수렴 확대	6	10%
4	기업활동 지원입법	5	8%
5	국회의원 특권축소	4	6%
6	국회의원 제재 및 퇴출요건 강화	3	5%
7	유권자 선택 신중해야	4	6%
8	국회의원 선출제도	4	6%
9	불합리한 제도혁파	3	5%
10	법안, 정책실명제, 정책일몰제	3	5%
11	언론과 여론의 감시	2	3%
12	국회권력 제도개선	1	2%
13	국회선진화법 개정	1	2%
14	국회의원 무노동 무세비	1	2%
15	대통령과 국회임기 일치	1	2%
16	복지관련 법안의 조건부 통과	1	2%
17	삼권분립의 강화	1	2%
18	전반적 정치, 경제, 사회 개혁	1	2%
19	정부입법 남용방지	1	2%
20	대안이 없다	1	2%
21	기타	1	2%
응답 수 합계		63	100%

정치금융: 선정이유와 정책대안

표 9-1. 정치금융 선정이유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 비율
1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와 전문성 부족	19	49%
2	정관계 지배유착 구조와 금융의 자율성 부족	14	36%
3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금융정책의 부재	4	10%
4	금융권 이기주의와 권위주의	2	5%
응답 수 합계		39	100%

표 9-2. 정치금융 정책대안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 비율
1	금융권 낙하산 인사 제도적 방지	17	43%
2	정치금융에서 제도적 자율성 확보	12	30%
3	금융 선진화 시스템 구축	6	15%
4	금융의 전문성 증대	5	13%
응답 수 합계		40	100%

일부 시민단체: 선정이유와 정책대안

표 10-1.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선정이유

	선정이유	응답 수	응답 비율
1	기업 꼬투리 잡기, 정치쟁점화	10	36%
2	대안없는 일방적 주장, 비판	10	36%
3	시민단체의 이익단체화	4	14%
4	무조건적인 노조옹호	4	14%
응답 수 합계		28	100%

표 10-2.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 정책대안

	정책대안	응답 수	응답 비율
1	시민단체 검증시스템과 책임강화	14	58%
2	시민단체 중립성 담보	3	13%
3	시민단체의 책임있는 대안제시	2	8%
4	토론과 소통의 활성화	2	8%
5	정책 수립시 기업입장 이해	1	4%
6	기타	2	8%
응답 수 합계		24	100%

기업발전 저해요인과 정책대안: 종합 요약

기업발전 저해요인	선정이유	정책대안	
정부의 기업규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인 규제완화 및 철폐	시장경제와 균형있는 규제정책
강성노조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이기주의	강성노조 법적 규제 강화	노사간 상생방안 모색
무소불위 기업 오너	경영권 세습 부작용	주주, 이사회 권한 강화	경영권 세습 제도적 규제 강화
사회 일반의 반기업정서	기업활동의 위축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반시장적인 국회와 정치권	여야간 정쟁, 반시장적 정책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국회의원 의정활동 공개 및 평가
정치금융	금융권 낙하산 인사, 자율성 부족	낙하산 인사 제도적 방지	금융의 자율성 보장
일부 시민단체	기업 꼬투리 잡기, 대안없는 비판	시민단체 검증시스템과 책임강화	시민단체 독립성 담보, 대안제시

조사 문의

- **조사관련 문의:**

한국리서치 심재웅 전무

직통전화 021-3014-0080 이동전화 010-3767-7008

이메일 jwshim@hrc.co.kr

